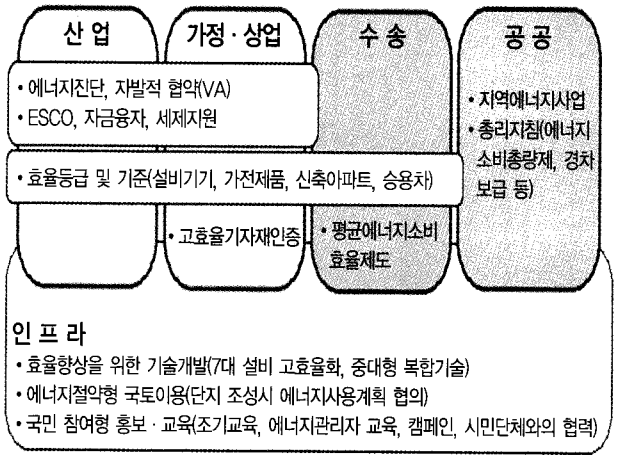
정부정책

에너지절약정책 수립 · 추진한다

Ⅰ. 정책 추진현황

■ 제3차 에너지이용합리화 기본계획(04~08년)을 중심으로 부문별 에너지절약정책 수립 · 추진 중

〈부문별 에너지절약정책 현황〉



① 산 업

- 에너지 다소비업체와 정부간 에너지절약을 위한 자발적 협약 체결(07년말 1,383개 사업장)
-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촉진을 위해 장기 저리 정책자금 융자(08년 5,281억원) 및 세제 지원
- 에너지다소비사업장(年 에너지사용량 2천toe 이상)의 에너지진단 의무화(07.1월~)
  * 07년 32개 진단기관이 383개 업체 진단
- 에너지절약전문기업(ESCO)을 통한 절약시설투자 지원
  * 현재 ESCO 등록업체는 156개, 07년 1,357억원 투자지원으로 117천toe 절감

② 가정 · 상업

- 가전기기 효율향상을 위해 효율등급표시, 최저소비효율, 고효율 기자재 인증, 대기전력저감제도 추진
- 건물 효율향상을 위해 설계단계부터 절약기술과 고효율에너지기자재를 적용하는 건물에너지절약설계기준 마련
- 신축건물 에너지효율에 따라 등급을 부여하는 건물효율등급인증제도 시행(현재 137개 단지 82,812 세대 인증 획득)
- 대형 상가, 아파트단지 등의 난방 효율화를 위해 집단에너지 보급 확대(02년 1,177 → 07년 1,580천호)

③ 수 송

- 자동차 에너지소비효율등급 표시제도 및 평균에너지소비효율제도 시행
  * 기준평균연비 : 1,600cc 이하 12.4km/ℓ , 1600cc 초과 9.6km/ℓ
- 경차 및 하이브리드차 보급을 위한 인센티브 제공
-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교통시스템(ITS, 전용차로제) 구축 및 서울시 중심으로 자율적 승용차 요일제 시행

④ 공 공

-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지침(96년)에 따라 민간부문보다 강도 높은 에너지절약정책 추진 중

정부정책

* 에너지소비총량제, 경차 구매 의무화 및 경차 주차 공간 확보, 승용차 요일제, 적정 냉난방온도 관리

II. 추진중인 시책의 강화

■ 경제단체 및 업계 의견을 수렴하여 오피스빌딩 시설개체 등 기업의 에너지절약투자에 대한 효율적 지원방안 마련

• 자금 · 세제지원 관련 정보를 기업에게 효과적으로 제공
* 정부지원현황에 대한 업계 인지도가 낮음(4.29일 정부 · 경제단체간 실무협의)

- 광역시도별 "에너지절약시책설명회" 개최 (에관공, 5~6월)

- 경제단체 홈페이지에 정부지원 내용, 자금신청방법 등 게재 검토

• 중소기업의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지원 강화

-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범위 확대 (소요자금의 90 → 100%, 08.2월부터 시행 중)

- 절약시설 투자시 제공되는 투자세액공제를 중소기업에 한해 상향 검토 (공제율 現 10%)

• 에너지절약시설설치 융자금 확대

■ 업종단체 중심의 에너지절약 확산

• 건설업, 백화점, 요식업 등 주요 업종별 정부 · 업계 간 간담회 개최로 자발적 에너지절약을 유도
* 건설업(6월), 백화점(7월), 요식업 · 숙박업(8월) 등

• 업종별로 추진 중인 에너지절약 기술협력사업(ESP : Energy Saving through Partnership, 9개 업종 204개 업체 참여) 강화
* 온라인 교류추진(에관공에 사이트 개설), 대중소 상생협력 강화(現 포스코 중심의 철강 → 08년 SK 중심의 석유화학으로 확대), 異 업종간 교류 등

III. 新 고유가시대 에너지절약대책

4.24일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, 한전 · 석유공사 등 에너지공급자, 시민단체가 참석한 「제16차 국가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」에서 다음의 에너지절약대책을 심의 · 토론

【산 업】 중소기업 대상으로 에너지 진단비용 지원을 확대하고(70→90%), 대기업에는 에너지경영시스템(EMS) 보급
* 에너지경영시스템 : 에너지비용 절감을 위한 全社的 에너지관리체계로 공인기관이 평가 · 인증 (08년 9개 기업 시범보급, 美 · 英 등 10개국 도입)

• 정부협약제도 도입으로 업체별 의무적 절감목표 달성
* 정부협약제도 : 기업은 정부와 협의하에 의무적 절감목표 수립, 정부는 이행실적 검증 후 인센티브 제공 (덴마크 등 도입)

【수 송】 생산 단계에서부터 고연비차량 보급을 위해 제작사별 기준평균연비를 '12년까지 15% 상향 조정
* 기준평균연비(제작 · 판매자별로 산정): 차종별 판매량으로 가중 평균한 연비
* 15% 상향: 1,600cc 이하(12.4 → 14.3km/ℓ), 1,600cc 초과(9.6 → 11.2km/ℓ)

정부정책

* 「자동차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표시규정」개정으로 연도별 목표 설정(08.9월)

• 서울시가 시행중인 승용차 自律요일제를 타 시도로 확대
* 08년 경기도 6억원 지원, 09년 타 지역으로 지원 확대

•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제 전일 확대(서초-오산, 08.7월~)

【건 물】 신축 단계부터 에너지절약형 건물을 유도하고, 에너지절약의 생활화가 가능하도록 제도 마련

• 선진국 대비 취약한 창호 단열기준 등을 단계적으로 강화
* 창호 단열기준(낮을수록 좋음) : (08)3.84 → (10)2.4, 절감률 25%

• 住公 등 공공기관 건설 공동주택에만 적용 중인 건물에너지효율등급제도(1~3등급)를 전 건물로 확대

※ 적용시기 : (現) 20세대 이상 공공기관 건설 공동주택 → (08) 100세대 이상 민간 건설 공동주택 → (09) 상업용 신축건물 → (11) 기존 건물

- 아울러 취득한 등급에 따라 용적률 차등적용 등 인센티브 제공

• 공공기관에만 적용중인 실내 냉난방 온도제한(여름 26℃이상, 겨울 20℃이하)을 단계적으로 확대

- 대규모 에너지 사용 건물에 대해서 단계적으로 시행
* 단계별 시행대상(안) : 1단계(년간 에너지사용량 2천toe 이상 공공 · 교육 · 위락시설), 2단계(백화점 등 대형 판매 · 업무용 시설)
- 주거부문은 사생활 침해, 실효성 저하 등 우려를 감안하여 적용 대상에서 제외
* 자율적 민간참여를 위한 가이드라인 역할, 아파트관리사무소(주택관리사협회)에 대한 지도를 통해 적정 온도 준수 유도

• 집밖에 나가지 않고도 마루나 부엌에서 언제나 전기사용량을 실시간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전기스마트계량시스템 보급
* 09년부터 신규 주택단지 중심으로 보급

【가전 · 조명】 '10년까지 모든 가전제품 대기전력기준을 1W로 제한하고 '15년까지 LED조명 비중을 30%로 확대

【공공부문】 공공기관 주차장 주차료 징수(08.5월 중앙청사부터), 신축 공공건물 에너지효율 1등급 의무화 등

【기반 조성】 에너지효율향상 의무제(EERS) 도입, 범국민적 에너지절약 분위기 조성 등

* EERS(Energy Efficiency Resource Standard): 에너지공급자에게 절감목표를 부여하고 목표 이행여부에 따라 인센티브 부여

• NGO를 중심으로 에너지절약 캠페인 추진

- 아파트 에너지절약,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, 적정 냉난방온도 준수 등 3대 주제 중점 추진